

2020년 제2차 기록관리 정책포럼 개최 결과

□ 정책포럼 개요

- 주 제 :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 및 체계 개편 방향

- 주제발표 ①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 진단 및 개선 방향: 안대희(국가기록원)
②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개편에 대한 소고: 한상효(국가기록원)
- 종합토론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 윤은하(전북대학교)

- 일시/장소 : '20. 7. 28. (화) 14:00~17:00 / 대통령기록관 대강당

- 참 석 : 총 82명

(내부) 원장, 대통령기록관장, 기록정책부장 및 관련업무 담당직원 등 46명

(외부) 대통령기록관리 업무 전문가 및 기록관리 업무담당자 등 36명

※ 행정기관(14명), 군(軍)행정기관(3명), 특별행정(1명), 준정부기관(4명),

지방자치단체(2명), 기타공공기관(8명), 대학기관(2명), 협회(1명), 민간(1명)

□ 추진 성과

- 대통령기록물관리 관련 제도·활용 방안 공유 및 논의

- 대통령기록물관리체계 혁신과 안정화를 위한 공론화 기반 마련

- 연구세미나 발표자료* 및 영상콘텐츠** 등 성과물 지속 활용

* 정책포럼 자료집(PDF) 및 개최 결과(PDF) 국가기록포털 게시를 통한 정보 공유 확대

** 정책포럼 발표·토론 현장 영상 국가기록포털 게시

- 세미나 개선 필요사항 발굴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

- 12개 문항(객관식 11, 주관식 1) 17명 참여, 만족도 총점 81.71

* '20년 행정안전부 성과관리시행계획 반영(목표 80점 대비 약106.8%(85.44) 달성)

↳(1회) '기록의 날' 기념 학술회의 80.52 / (2회) 제1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94.09 /

(3회) 제2차 기록관리 정책포럼 81.71

□ 주요 논의 내용

- 대통령기록물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전방위적·미래지향적 검토의 필요성

-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문적 연구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의 중요성

- 대통령기록관과 기념관의 역할에 대한 고찰과 향후 지향점 논의

※ 국가기록원 조직개편(8.5.)으로 직책(연구협력과장에 다소 변경이 있으나, 당시 직책으로 표기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박종연 위원장) 대통령기록관리제도 혁신은 입법미비사항 해소가 아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서 출발해야 함. 제도개선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앞으로 10년의 대통령기록관리체계에 대한 설계를 기반으로 해야 함. 전직 대통령의 열람, 지정기록물 권위 실시 권한, 개별대통령기록관, 공개재분류, 폐기절차는 대통령기록관의 당면과제이지만, 과제해결이 대통령기록관리 체계변화를 수반하지는 않음. 당장 내일이라도 또 다른 현안이 대통령기록관리 체계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논의의 폭을 확대하고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전반을 돌아보아야 함.
- 첫 번째로 생산단계부터 이관·보존·활용, 그리고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 인식개선 등 대통령기록관리체계의 전 과정에 걸친 검토를 통해 문제를 진단해야 함. 특정업무 담당자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며, 조직에서 시작되어 공동체로 확대하여야 함.
- 두 번째는 경험과 문제의식의 공유임. 대통령기록관리는 공공기록관리와 달리 현장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유추하거나 체득할 수 없음. 대통령기록관리체계 혁신과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전문가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며, 그 경험과 문제의식은 제도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임. 따라서 경험과 문제의식 공유를 위한 유연성이 발휘 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은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의 목적과 필요성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기록공동체 내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함. 대통령기록물법의 목적이 기록관리 환경변화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나아가 법령상 주무기관인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피고, 대통령기록관의 존립문제로 확장해야 함. 통합적으로 대통령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은 대통령기록의 안정적인 생산과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2007년의 사회상이 반영된 결과지만,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통령기록은 생산과 보호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며 이와 더불어 대통령기록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고 있음.

한편 서고 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재 등 외형적인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사안은 전문성에 대한 문제임. 대통령기록을 연구하고 기록의 특성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체계를 고민하는 ‘대통령기록 전문가’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음.

그동안 전시·교육·연구지원을 위한 콘텐츠 생산 방식은 어떠했는지, 그 서비스 대상은 누구였으며 이들은 무엇을 요구하였는지, 미국과 한국 대통령기록의 범주차이를 인지한다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인지, 대통령기록의 활용으로 대통령기록관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지와, 이 이득으로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국 대통령기록관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질문을 던지고자 함.

대통령기록관은 여타 정부기관과는 시작부터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기계적 중립성에 매몰된 전시와 교육이 설립 당시부터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대통령기록 전문가의 부족과, 이용자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을 것임. 이러한 결과들은 대통령기록관이 보존시설이라는 각인을 지울 수 없게 함.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정상화해야 하는지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기록관리를 단순히 이관 받은 기록을 관리하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기억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함. 대통령기록관의 분리는 제도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치열하게 연구해야 함. 대통령기념관 등과의 연대와 협력을 넘어서, 관련 기억기관을 포괄하는 구상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이 법에 규정된 프로세스를 ‘처리’ 하는 것에만 만족해야 할 것임.

- (전북대학교 윤은하 교수) 대통령기록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무엇인지 점점 부각된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임. 2018년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전환할 경우 많은 정치·제도·경제적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델을 찾으려고 했지만 만족스러운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았음. 그럼에도 대통령기록을 기반한 연구서비스 활성화는 명백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음.

통합기록관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이라는 한계 속에서 어느 대통령의 기록물도 적극적인 연구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졌다는 데 동의하고,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이 개별화되어 가지는 장점이 분명하다고 생각함. 이것을 전제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토론해보고자 함.

첫째는 실질적인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조직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개별대통령기록관이 통합대통령기록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더 자유롭고 공정한 연구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뀔 수 있다고 보는지 질문드림. 구체적으로는 생산기관에서의 이관·수집이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더 유리한지, 또는 분류 및 정리기술 작업이 더욱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시행될 수 있는지, 보존정책이나 보존방식 측면에서 더 원활한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제도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임. 둘째는 지정기록물과 관련된 연구서비스 지원에 관한 것임.

지정기록물의 관리는 대통령기록관리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서비스를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함. 16대 노무현 대통령기록물 이관량의 1/3, 17대 이명박 대통령 기록물 중 절반인 약 25만 건, 18대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중 1/2인 약 20만 건의 기록물이 지정기록물로 등록되어있다고 알고 있음. 사실상 중요하고 민감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용하길 원하는 대부분이 지정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의 체제변환이 얼마만큼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대통령기록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함. 또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의 전환이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궁금함.

대통령기록과 개별대통령기록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 할수록 예산과 정책, 기록관리 프로세스 등 모든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원활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은 이관부터 보존에 이르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용자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때 가능함. 그래서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연계서비스적인 장점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전제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지 고민해야 서비스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국가기록원 김형국 연구협력과장) 종전의 개별대통령기록관 논의는 인프라적인 측면이나 지정기록물에 대한 대통령 측의 활용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오늘 발표에서는 서비스 측면에서 장점을 밝힌 것이 새로웠음.

○ (국가기록원 안대희 학예연구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대통령기록관리체계 전반을 설계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함. 다만 2007년에 대통령기록물법 시행 이래 다양하게 발생한 운영의 미비점 등을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음. 그것이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 대통령기록관이 지향해야 할 내용도 포함 함.

대통령기록관에 온 후, 개별대통령기록관 법 개정과 대통령기록관의 존재이유에 대해 매일같이 스스로 질문했고, 첫 대통령기록물법 개정과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 토론하면서 느낀 것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록관리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대통령기록관이 가지고 가야 할 것들보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었음.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이미 15년이 지난 생각이라 어떤 부분은 유효하지 않은 부분도 있음. 특히, IT기술의 변화, 그리고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 요구 등이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 여전히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 제도는 보존 중심으로 방점이 찍혀있어, 근본적으로 한번쯤 큰 틀에서 되돌아보고 다른 체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고민하게 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아젠다를 생각지 않는 것은 아님. 매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했고, 시급한 과제들은 바로 제도개선 했으며, 나아가야 할 방향들은 또 다른 혁신과제들로 계속 논의중임. 이 부분은 향후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학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임.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박종연 위원장) 대통령기록관리체계 개편의 지향점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대통령기록관 자체가 보존시설일지 아니면 대중문화기관일지 목표의식은 명확해야 함.

대중문화기관이라는 역할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변동해야 하지만, 대통령기록관 자체는 문화시설이기 이전에 대통령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1차적이고,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잡는 게 혁신에 도움 될 듯.

앞서말한 15년 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언급 중 유효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궁금함.

- (국가기록원 안대희 학예연구관) 대통령기록물관리 제도는 그 당시 논의를 통해 특별법을 만들고, 대통령기록을 이관 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 복원이나 보존 측면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활용 측면에서 보면 법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한계임. 또 하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개별뿐 아니라, 연구센터, 도서관, 전시관 등 문화기관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적으로는 불가능함. 법 취지나 성격으로 보면, 대통령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는 이원화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 (국가기록원 김형국 연구협력과장) 연구문화기관으로 거듭나고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데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후 넘어 온 기록에 대한 검증도 필요함. 법 제정 후 이관 된 백만 건의 기록 중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는 문서도 있지만, 가치가 없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가 포함됐을 수도 있어 양적으로 과대포장 된 부분은 없는지, 실제 질적으로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제없이 이관·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함. 지정기록물도 거의 1/3이나 절반가까이 지정되어 있는데, 제대로 지정되고 있는지. 또 사후 이관시점에 지정하면 과대 지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결국 서비스를 위해 생산시점부터 보존기한을 정하거나, 지정에 관한 예규 의견을 넣는 등 근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국가기록원 한상효 공업연구관)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의 특성에 따른 연구를 하고 관리체계를 고민하는 전문가가 얼마나 있냐는 물음에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 죄송스러움. 작년 개별대통령기록관 이슈로 많은 기관에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책감과 고민이 많이 들었음. 외국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선례는 무수히 많고, 현재 시민들을 위해 얼마만큼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도 충분히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지만 우리 대통령기록관은 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및 적용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능이 아직 부족함.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 전시관 연간 방문자 수는 미국 13개 대통령기록관 평균 방문자 수와 거의 동일한 16만 명 정도인데, 재방문 의사를 물었을 때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음. 국민들이

대통령을 기억하고 평가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관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이런 공론화 과정이 앞으로 대통령기록관리체계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듯.

개별대통령기록관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연구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냐는 물음에는, 현재 통합대통령기록관이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연구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함. 다만 개별대통령기록관에 대한 형태는 더 논의가 필요함. 물리적인 건물을 가지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이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연구지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디지털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 온라인 형태의 디지털 개별대통령기록관 (보존과 활용을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를 갖추지 않는 형태) 등 여러 가지 설립 형태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가장 적합한 설립 형태 도출이 필요함. 통합대통령기록관에서도 대통령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통령직에 대한 연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 재임 이전 대한민국 역사를 바탕으로 형성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상과 정치적 신념 등을 통합대통령기록관에서 다루기는 한계가 있음. 그래서 아직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은 어떠한 형체가 됐든지 통합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두 번째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핵심적인 서비스 내용이 지정기록물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생산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에 대한 서비스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함. 물론 국민의 알 권리에 있어서 지정기록물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한편으로는 생산자가 생산한 기록물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경우 생산을 포기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있다고 생각함. 통합과 개별대통령기록관과의 역할분담 관점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시급히 개선하기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은 1940년에 발족했고, 우리는 불과 13년 되었음. 미국도 80년 동안 체계가 잡혔듯, 우리도 충분히 논의와 공론화과정을 거치면 현재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박종연 위원장) 지금까지 대통령기념관과 대통령기록관의 차이는 크게 이야기 되지 않음. 엄밀히 따진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 재임기간에 관련된 업무관련 기록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형태로 변화됐으면 하는 의지가 보였음. 그래서 이 개념부분을 조금 더 정의했으면 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기록관 자체목표가 높아야 된다고 봄. 발표에서는 지역 관련 기관들과의 연대를 말씀했지만, 대통령기록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대가 쉽지 않음. 따라서 차라리 그들과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의견임.

- (국가기록원 김형국 연구협력과장) 미국의 개별대통령기록관은 기념관 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기념관이 별도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기념관과의 관계 또는 통합 부분도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 참고로 2007년도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기념관을 기록관으로 바꾸자는 논의도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듯.
- (국가기록원 안대희 학예연구관) 2018년 개정안, 지금 현재 개정안의 조항들에는 생산단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와 지원·협력에 대한 내용이 있음. 그래서 이 법이 빨리 통과되고, 실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 (국가기록원 한상효 공업연구관) 개별대통령기록관이 기념관의 기능을 분리했을 때 미국과 같은 문화적 기관으로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고민해 보았음. 미국의 개별대통령기록관도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이라는 용어를 포기하고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으로 이름 지었음. 그리고 행정문서로 대통령의 일대 역사적인 가치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 한계를 인정하고, 대통령의 메모장이라든지 일기, 유년시절에 만든 조각품과 같이 국민들이 훨씬 좋아하는 전시주제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많이 봄. 대통령기록관과 기념관은 분명한 기능적인 차이가 있지만, 향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 할 때 기념관과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재임기 생산한 행정문서만으로 미국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미국도 루즈벨트 이전 대통령기록관은 전부 유족이나 재단들이 소유함. 루즈벨트 이후는 민간이 건립해서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의 대통령 도서·박물관임. 우리도 대통령기록물법 전후로 이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는 포괄적으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될 듯.

- (국가기록원 유래육 공업사무관) 대통령기록관의 저장률이 궁극하고, 두 번째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데, 대통령기록관은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함. 개별기록관이나 기념관은 사후에 만들고, 업적 위주로 홍보를 하면 통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함.
- (국가기록원 고응석 행정지원과장)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함. 기존의 보존기간이나 비공개 관련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보호제도로 별도의 생산자 본인이 어떤 기록물을 지정해서 봉인한다면 민주주의체제하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책임성, 공개투명성은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됨. 그리고 해제를 위해서는 헌법개정안 발의 때와 동일한 국회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데, 정치·행정적 낭비 요인은 없을지 의문임.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자의 책임감 담보를 위해 의사결정에 따른 내역은 보존돼야 하고, 보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일반적 규제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함.
- (국가기록원 한상호 공업연구원) 통합기록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대통령기록물과 5대, 25년에 걸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양으로 가늠함. 현재 3대까지 받은 시점이고, 향후 20대 대통령기록물까지 받으면 만고인 상황임. 작년 기록물 유형별 서고 사용률에 대한 국회 답변으로, 행정박물 선물 서고는 이화장이 수침을 겪으면서 일부 이관된 기록물과 윤보선 대통령 후손께서 위탁한 기록물로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83.7%, 지정기록물 서고는 70%임. 문서는 42%로 당초 예상보다 한 대 더하여 21대까지 받을 수 있을 듯. 성남의 나라기록관도 건립당시 25~30년을 기준으로 연구용역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국가기록원도 만고시점이 거의 도래하여 보존시설 건립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음. 현재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국가 지원을 받아 건립한 기념관은 네 개임. 그 중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과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은 사후에 건립되었고,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과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은 생전에 지원금을 받아 건립됨. 기념관 건립은 이미 퇴임 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을 포함할 경우에는 50%, 공공시설이 없는 기념관일 경우 국가재정으로 30%를 지원함. 그래서 건립 시기는 선례가 있고 법에 있기 때문에 조정은 어려울 듯.

- (국가기록원 안대희 학예연구관) 대통령은 국정 최고 통솔자로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인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생산됨. 그것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과거 정부 사례처럼 생산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제정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일정부분 제한하지만, 역설적으로는 보호기간 완료 후 국민의 알권리를 보전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듯.
- (국가기록원 한상호 공업연구관) 참고로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유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에 한해 퇴임 후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 5년 뒤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신청 할 수 있는데, 미국 대통령도 12년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음. 대통령기록물은 물론 국민들이 봐야 되는 기록물이고 정보이긴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정치적인 민감성과 외교·정치·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호기간을 두지 않았나 생각함.
-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 대통령기록은 공개와 활용을 막으면서까지 지정기록으로 보호해야 될 정도로 민감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대통령기록의 민감성과 대통령기록제도의 민감성은 동일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학계에서도 더 큰 목소리로 이 제도에 대해 실험적으로 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함. 대통령기록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제도는 오늘과 내일의 한국사회를 위한 제도임. 이 제도에 의해 기록물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잘 보호했다가 더 오래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와 업무의 혁신, 더 많은 기록과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함.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도 애쓸 테니 많은 도움 바람.



붙임 3

정책포럼 참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요약)

문항	총계	만족도(점수)					미응답
	81.71	65	87	26	4	5	16
문항1. 포럼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소계	매우만족(100)	만족(80)	보통(60)	불만족(40)	매우불만족(20)	미응답
	81.18	5	9	2	1	0	0
문항2. 포럼 운영은 적절했는가? (장소, 안내, 자료)	소계	매우적절(100)	적절(80)	보통(60)	부적절(40)	매우부적절(20)	미응답
	84.71	7	8	1	1	0	0
문항3. ★ 최고 시간배분은 적절했는가?	소계	매우적절(100)	적절(80)	보통(60)	부적절(40)	매우부적절(20)	미응답
	85.88	6	10	1	0	0	0
문항4. ★ 포럼 주제는 적절했는가?	소계	매우적절(100)	적절(80)	보통(60)	부적절(40)	매우부적절(20)	미응답
	85.88	7	8	2	0	0	0
문항5. 기조연설 및 발표내용은 주제와 적합했는가?	소계	매우적합(100)	적합(80)	보통(60)	부적합(40)	매우부적합(20)	미응답
	80	5	9	2	0	1	0
문항6. 주제에 따른 발표자섭외는 적절했는가?	소계	매우적절(100)	적절(80)	보통(60)	부적절(40)	매우부적절(20)	미응답
	77.65	5	7	4	0	1	0
문항7. 발표내용에 따라 토론이 적절했는가? (내용, 시간 등)	소계	매우적절(100)	적절(80)	보통(60)	부적절(40)	매우부적절(20)	미응답
	83.53	5	10	2	0	0	0
문항8. ★ 최저 토론자 섭외는 적절했는가?	소계	매우적절(100)	적절(80)	보통(60)	부적절(40)	매우부적절(20)	미응답
	76.47	5	6	5	0	1	0
문항9. 본 포럼이 기록관리 정책에 대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는가?	소계	매우만족(100)	만족(80)	보통(60)	불만족(40)	매우불만족(20)	미응답
	77.65	6	6	3	1	1	0
문항10. 본 포럼이 기록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는가?	소계	매우도움됨(100)	도움됨(80)	보통(60)	도움안됨(40)	매우도움안됨(20)	미응답
	80.00	5	8	3	1	0	0
문항11. ★ 향후 정책포럼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소계	매우있다(100)	있다(80)	할수도있다(60)	없다(40)	매우없다(20)	미응답
	85.88	9	6	1	0	1	0

	소계	주관식	미응답
	1건	1	16건
문항12. 향후 개최 시 반영할 개선점이 있다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이미지, 발전적 이미지의 포럼 개최를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는 기록관리제도 개선을 기록활용방안 개선으로 했었다면. ○ 대통령기록관의 기록 저장능력 확보방안 연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술, 가구 등을 과연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해야 하는지.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이전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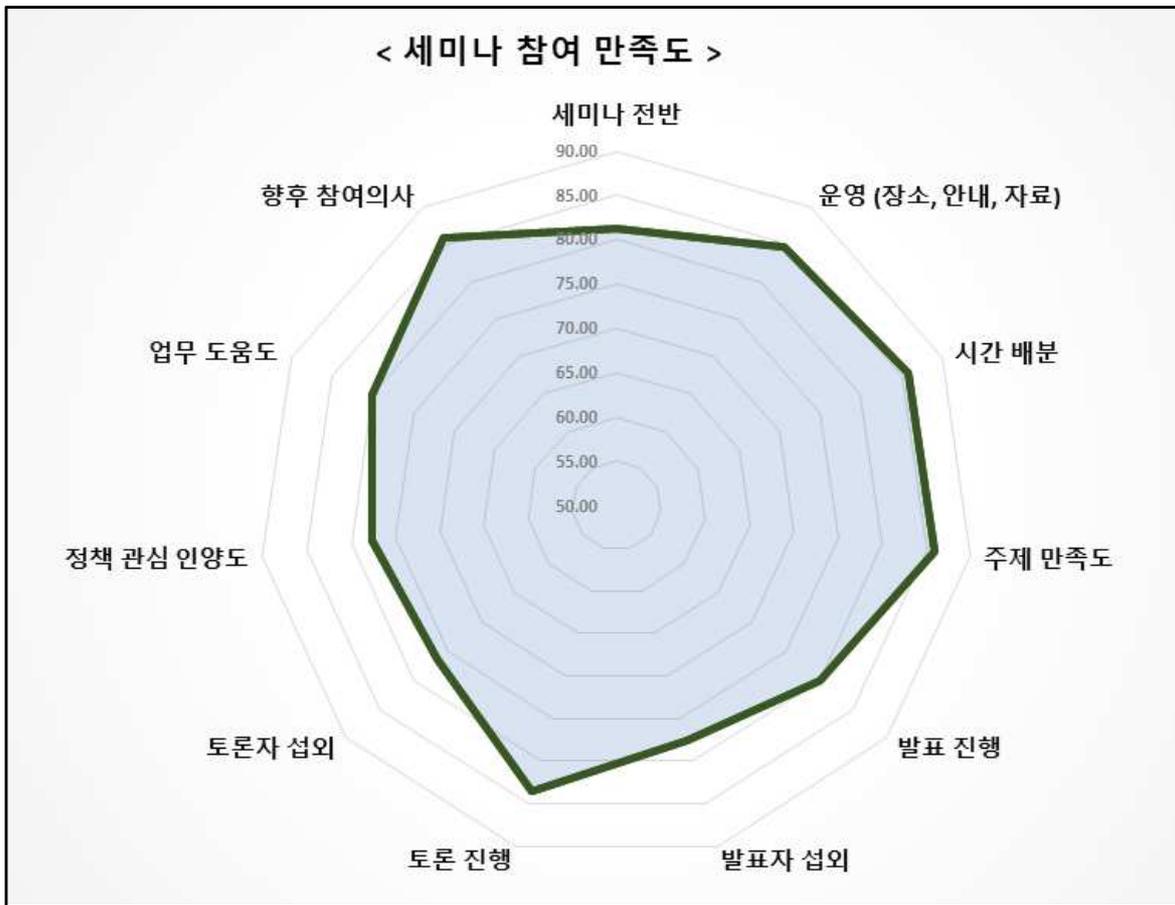
○ 총 평 : 성과목표(평균 80점) 106.8% 달성

* '20년 행정안전부 성과관리시행계획 반영 목표치: 평균 80점(만족도 총점÷개최횟수)

연번	개최명	개최일	총점
총계	총 3회		평균 85.44
1	'기록의 날' 기념 학술회의(제1차 정책포럼)	2020. 6. 9.	80.52
2	제1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2020. 7. 8.	94.09
3	제2차 기록관리 정책포럼	2020. 7. 28.	81.71

- 목표 점수(80점)에 대비했을 때, 발표·토론자 섭외와 기록관리 정책에 대한 관심 인양도 부분이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음
 - ⇒ 앞서 진행했던 학술회의와 연구세미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발표 시 들었던데 비해 이번 제2차 기록관리 정책포럼에서는 내부 발표자로만 진행하고, 토론자 구성 인원도 1명 적었음
 - ↳ 발표·토론자 구성을 주제에 맞게끔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음
-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이미지를 주는 포럼 주제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 주제명도 '제도 개선'보다는 '활용방안 개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등 구체적 의견 제시
 - ↳ 향후 포럼·세미나 주제 선정 시 고려하여, 보다 발전적인 주제명을 선정토록 하겠음

○ 학술회의 참여 만족도 그래프 요약



○ 설문조사 응답자 통계 분석

